

ISSUE & FOCUS

Newsletter 2017-6(2)

문재인 행정부의 ‘대화와 협상’ : 위험성과 대응과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ICBM 개발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지난 2월 개량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5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발사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발사, 지대공 유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로 미사일의 다양화·다종화를 실현하고 있다.

북한의 ICBM 개발 저의는 북미평화체제구축 요구 → 주한미군철수 → 핵을 앞세운 한국의 흡수통일'의 대남적화(Red Korea)의 완성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Red Korea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핵질주를 용인하는 꼴이 됨과 아울러 결국은 북한의 Red Korea전략을 지원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오히려 안보불감증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작동되면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안보적폐(安保積弊)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중국은 '민생용'이라는 명분으로 제재의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이용해 북한에 암묵적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동구권, 구소련, 베트남의 체제전환 또는 개혁개방을 선택할 시점의 시대 상황은 '기존체제에 대한 절망감'이 매우 높은 '최악의 상황'이었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수사적(修辭的) 아름다움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압박과 변화'와 완벽한 국제공조로 수정되어야 한다.

1.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날로 진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매년 1월1일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 '신년사'는 북한의 1년을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세인의 주목을 받아 왔다. 금년 신년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6월10일 노동신문을 통해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시점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ICBM의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며, 핵과 미사일 중심의 비대칭전략이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성공한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갖고자 하는 야욕은 당연해 보인다. 금년 들어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12일 동해로 개량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작으로 매월 발사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를 직접 겨냥해 14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를 발사하고 21일에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을 발사했다. 그리고 5월 27일에는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을 개량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그 직후인 29일 스커드계열 지대함·지대지 겸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금 북한은 미사일의 다양화·다종화를 실행하고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사일의 다양화·다종화의 최종단계인 ICBM을 완성해 미사일 라인업을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지난해 3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에서 1500~1600도의 삭마시험에 성공했다. 하지만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6000~7000도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CBM의 첫 시험은 금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성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지원이 주요한 것 같다.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자 전용 대규모 아파트단지(소위 북한판 타워 펠리스) 조성 및 입주, 과학휴양소와 전용상점 설립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많은 공을 들여온 결실로 보인다.

2. ICBM에 집착하는 북한의 의도

현재 북한은 사거리 1만km 이상의 장거리미사일 대포동2호를 비롯해 8종류의 미사일이 있다. 북한이 개발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만 있어도 한국과 일본 전역을 위협·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노리는 ICBM의 용도는 ‘장거리핵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에게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북미평화체제구축을 요구 → 주한미군철수 → 핵을 앞세운 한국의 흡수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완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무력을 앞세운 흡수통일을 통해 대남적화(Red Korea)를 완성하는 것이며, 1945년 분단이후 단 한 번도 대남적화를 포기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Red Korea를 위한 수단이 진화되었을 뿐이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적화수단이 재래식 무기에 의존했다면 김정은은 적화수단을 핵과 미사일로 전환하였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2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이 이를 반증한다.

김정은이 국제사회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근원은 ‘핵을 앞세운 한국의 흡수통일’이라는 통일대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앞세워 통일대전을 완성하려는 길에 ‘대화과 협상’은 눈가림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김정은은 ‘결단코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인물’이기에 ‘대화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대화과 협상’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할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의 다양화, 다종화를 위한 시간벌기의 수단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3. ‘대화과 협상’의 위험성

김정은의 Red Korea 통일대전략의 중심축은 핵과 미사일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의 광폭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며, 광폭질주는 Red Korea가 완성되어야만 멈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는 ‘대화과 협력’에서 방책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언급을 시발로 새 정부의 통일안보담당자의 면면을 보면 남북대화 및 협상론자 위주로 인선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대화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김정은의 광폭질주는 ‘대화과 협상’을 통해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폭주를 암묵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북핵위기 이후 많은 ‘대화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고 ‘대화와 협상’에 매달리는 것은 북한의 핵질주를 용인해줘 결국은 북한의 Red Korea 전략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행정부의 북한에 ‘대화와 협상’ 제안은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자강(自強)을 훼손시킬 수 있다. 김정은의 핵질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이 김정은의 핵질주를 차단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인시켰고 이것이 김정은의 핵질주가 한국안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인케 한 주범이었다. 이런 안이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적극적 대피연습에 대해서는 ‘호들갑 떨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행태를 보이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기예보 정도로 여기는 안보불감증이 확산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화와 협상’이 오히려 안보불감증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안보적폐(安保積弊)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부터 7차례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 6차례의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은 ‘핵실험은 자위권적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다.’라고 공언하면서 핵실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금년 6월 처음으로 결의안 2356호가 채택되었다. 사실 금년 4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중국의 원유공급중단 압력이 6차 핵실험을 중단시킨 1등 공신이었던 외신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은 이상에 불과하고 ‘압박과 변화’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지역보다 대한민국이 직접적 위협을 받는다. 이 점을 무시하고 한국이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국제사회만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화와 협상’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구실로 삼을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공조를 요청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특히 대북제재의 핵심 키를 가진 중국이 ‘민생용’이라는 제재의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만들어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주는 현실에서 한국의 ‘대화와 협상’은 중국의 역행적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한국은 ‘5·24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가 골자이다. 그리고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고육지책이었

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나 조건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더 악화된 상태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와 협상’을 제안한다는 것은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또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4.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의 대북정책의 목적은 북한의 근원적 변화 -개혁·개방- 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원적 변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근원적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상황’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의 경험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물론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속성보다는 독특한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상황은 유사하기 때문에 체제전환국의 경험은 유효하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1980년대 중반 동구권의 체제전환,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베트남의 도이머이(Doimoi) 정책을 선택할 시점의 상황은 거의 ‘기존체제에 대한 절망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선택할 시점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로 지배엘리트들의 체제전환 의지는 기존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체제붕괴의 위기도 동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문제가 악화될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강건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지배엘리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소로 작동했다.

구체적으로 체제전환국은 ‘경제의 구조적 왜곡의 심화’, ‘외부정보유입에 의한 불만 팽배’, ‘소득분배 불균형의 심화’,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의 역할로 지배엘리트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최악의 상황’에서 개혁·개방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야만 근원적 변화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북한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수사적(修辭的) 아름다움에 도취될 경우 오히려 김정은이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년 이상 국제사회가 매달려 왔던 제네바합의, 6자회담, 9·19공동선언 등과 ‘대화와 협상’의 산물들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북협상전략은 ‘압

박과 변화'와 완벽한 국제공조로 수정되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과 협력'의 카드를 먼저 들고 나오는 행동은 국제공조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급한 선택이다. 그리고 외부정보유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달하는 '정신적 지원'이며 북한민주화의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다. 외부정보유입이 '정신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정보화는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비대칭전략 자산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정보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개발하고 이를 유입시킬 수 있는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 정보화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인 행정부의 적극적 정책방향의 선회가 요구된다. 또한 '압박과 변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튼튼한 안보(자강)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자강이 우선이지만 동맹은 자강을 보완해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동맹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최근 사드배치 논란과 석유공급방해, 의정부의 '미2사단 창설기념콘서트'에서의 자주파의 반미시위,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자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자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